

제국주의 상호간 패권쟁탈전, 제3차 세계대전 반대! 한반도 핵전쟁 획책하는 미·일제국주의 규탄! 전쟁광 바이든 정권의 푸들 보수양당 독재권력 타도!

2022년 11월 30일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지구촌과 한반도에 제3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이래 우크라이나 땅에서 10달 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에는 강대국 러시아와 약소국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크라이나라는 먹이를 놓고 두 제국주의 세력인 미·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러시아가 벌이는 영토쟁탈전임이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는 러시아 턱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 러시아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영국의 초음속 브림스톤 미사일

이런 미·나토의 도발에 대응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크라이나에 70조원에 이르는 첨단무기와 군사물자를 지원해 완강하게 러시아에 맞서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막고자 별 준비 없이 특별군사작전을 벌인 러시아는 장기전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럽이 동참하게 끌어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해 전방위적인 국제 경제·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축출하고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를 강제했습니다. 러시아의 돈줄을 말려 경제를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려는 책략입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가치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국제 반러시아 동원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서구와 반서구 진영 간 국제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3차대전은 이미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한 미 제국주의는 유라시아대륙 전역에서 전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반미·반서구 입장을 가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자 전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편에 서서 이란을 대놓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대만을 지렛대 삼아 중국과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내 독립시키고,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경우 대만을 돕는다는 구실로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남북간 대결을 격화시키고 이를 빌미로 반제국주의 입장을 가진 북한을 향한 전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실은 거꾸로입니다. 미국은 소련붕괴로 탈냉전 시대가 왔음에도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력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북한의 핵무력 개발을 구실로 북한을 침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수작전이라니 말부터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은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본질은 제국주의 상호간의 패권쟁탈 전쟁입니다.

이 세계대전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한쪽이 미·서구·일본 제국주의 세력인 것은 분명한데 다른 쪽이 누구인지는 다소 복잡합니다. 이란과 북한을 향한 전쟁을 놓고 보면 이 전쟁은 미·서구·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약소민족해방 국가들을 재정복하려고 벌이는 전쟁처럼 보입니다.

부시는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나자 반제국주의 민족해방국가인 이란·이라크·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 후 민족해방국가 쿠바·시리아·리비아가 악의 축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라크·리비아·시리아는 이들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명분만 바꾼)에 의해 국가가 파괴되거나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은 테러와의 전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던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함께했던 이들은 왜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의 제3차 세계대전은 미·서구·일본 선발 제국주의 세력이 중·러 후발 제국주의 세력의 도전에 직면하여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선발 제국주의 세력의 패권과 주도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배권은 왜 쇠퇴합니까? 이들 선발 제국주의 나라들의 자본주의가 급격히 쇠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물론 유럽과 미국 자본주의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발 제국주의 나라인 중국은 2050년에는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이 되겠다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퇴하는 제국주의와 상승하는 제국주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에서 수세에 처한 선발 제

국주의 세력이 기존 패권질서를 지키고자 전쟁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는 후발 제국주의가 도발자였는데 이번에는 선발 제국주의가 도발자입니다.

이들의 탐욕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심중팔구 핵전쟁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핵전쟁은 인류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자본의 탐욕이라는 부도덕한 목적을 위해 인류 절멸을 가져올 핵전쟁이 될 것이 분명한 도박을 벌이는 데 대해 세계 노동자·민중은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제국주의적 탐욕을 위해 이런 무모한 전쟁을 벌이는 두 제국주의 블록 모두를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한편 이 전쟁을 주동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미·서구·일본 패권 제국주의 세력은 이들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온 민족해방 국가들도 이참에 함께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침략으로 리비아와 이라크는 이미 재정복되었고 이란과 북한이 다음 재정복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제국주의 블록 가운데서도 특히 약소민족의 민족해방국가를 전복하려고 전쟁을 획책하는 미·서구·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더욱 강도 높게 규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반대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인류가 파멸될 뿐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가 파멸될 것입니다.

민족파멸을 자초하는 한반도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 제국주의의 거짓말에 속아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도발’이라고 규탄하기에 앞서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미·일 제국주의를 규탄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력 개발은 미·일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진실이 이러한데도 그들 제국주의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족파멸을 가져올 동족상잔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제정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신 나간 정권은 권좌에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 제국주의를 추종하면서 대북적 대시에 동참하고 있는 보수야당 권력도 타도돼야 합니다. 이참에 보수야당독재를 끝장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즉각 실시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 신상, 경위 공개하라!
이태원 참사 발생과 진상은폐 책임지고
윤석열 정권 총사퇴하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참사는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를 빼닮았습니다.

첫째. 진상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의 경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사건을 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참사에 검찰은 손놓고 있고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둑더러 도둑 잡으라는 꼴입니다. 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므로 경찰은 빼고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검찰은 정권의 수족으로서 제대로 수사할 것 같지 않으므로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토록 해야 합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하여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국정조사로 피의자와 관련자들이 진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어야 국민들이 진상조사에 함께할 수 있고 참사의 진상을 생생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는 예산심의를 핑계로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즉각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이번 참사에서는 애도와 추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도는 국가가 정하면 국민은 거기에 따라야 할 뿐 스스로 애도할 수 없게 통제했습니다. 일주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애도를 표시하면서 그 후로는 애도든 기억이든 추모든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심지어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까지 공무원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가 야당대표와 면담을 하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희생자의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그게 분향소 맞는가, 그런 분향소 보셨나, 이것은 2차가해다”라고 항의했겠습니까?

셋째. 윤석열 정권은 참사 희생자나 부상자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행안부장관

이라는 자가! 이로 인해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그곳에 갔다가 어떤 경위로 희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받을까 봐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까?

이렇게 사태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데는 정부·여당뿐 아니라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 시민단체, 정당들의 책임도 큼니다. 이들은 개인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희생자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참된 개인인권보호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사가 일어났으면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가 희생되었는지, 어떤 연유와 과정으로 희생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들과 공감하고 연대하고 모두가 함께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칭 진보 언론, 정치, 시민운동은 자신들이 그동안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란 없다!”고 주장한 악명 높은 영국수상 대처처럼, 공동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적 개인의 존재를 절대화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었음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방식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 피의자를 대하듯이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촛불혁명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참사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아무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물가앙등, 청년실업, 노인빈곤, 주거빈곤, 가계파산, 자살(노인, 청소년, 가족동반), 친족살해 등 민생파탄과 사회해체 책임지고 보수양당독재권력 물러가라!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것을 만들고 민생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이 고작 부동산금융규제완화입니다. 집값 떨어지는 것 막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금융규제완화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생이 잘 되려면 경제가 잘 돼야 하고 경제가 잘 되려면 시장에 맡겨야 하니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합니다. 경제를 시장 즉 자본에 맡겨서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민생이 파탄났는데 더욱 시장과 자본에 맡긴다니 완전히 거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 화물연대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하는 데 대해 “집단의 힘으로 민생을 위협”하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강경하게 진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폭등시켜 집 없는 서민들을 주거빈민으로 전락시킨 정권이 바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물가를 폭등시킨 정권이 바로 코로나팬데믹을 핑계로 돈을 풀어 물가폭등을 유발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더니 슬그머니 일자리 상황판을 철거한 것이 그들 아닙니까? 재벌을 해체해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직장도 좋은 일자리가 될 텐데, 그리하여 청년일자리 문제가 완화될 텐데, 경제를 살린다며 재벌개혁은커녕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을 석방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까? 노동존중 사회 만든다더니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민생파탄에 대해서는 현 윤석열 정권만이 아니라 전 정권담당자인 더불어민주당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생파탄 방조한 보수양당독재 타도하자! 보수양당독재 타도하고 민중권력 쟁취하자!

민중권력 쟁취하여 독점재벌 해체하고, 주택재분배와 택지국유화 실시하자!

민중권력 쟁취하여 시장(자본) 독재 타파하고 민주적 경제계획 실시하자!

민중권력 쟁취하여 전면적 사회보장 실시하자!

보수양당독재 타도하고 민중권력 쟁취하여 물가양등, 청년실업, 노인빈곤, 주거빈곤, 가계파산, 자살(노인·청소년·가족동반), 친족살해의 지옥에서 벗어나자!

파쇼악법(국가보안법·노동악법) 철폐하라!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었다는 나라에서 아직도 파쇼악법들이 버젓이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화된 나라입니까?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이 반공분단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해 만든 파쇼악법입니다. 거기에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반공태세를 재정비강화 한답시고 반공법을 추가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막걸리 반공법’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머리에 들어 있는 생각까지 처벌하는 반공법에 대한 국내외 반대가 높아지자 반공법을 슬그머니 이승만 국가보안법에 합쳐버렸습니다. 이것이 극악무도한 현재의 국가보안법입니다.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민주정부들 아래서 마땅히 철폐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폐지를 논하더니 야당이 반대한다며 그대로 두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주었음에도 폐지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다. 이것은 그들 또한 반공파쇼 보수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양당독재 타도하고 민중권력 쟁취하여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국가비밀경찰 국정원은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공파쇼체제의 양날개입니다. 5.16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중앙정보부이고 제일 먼저 만든 법이 중앙정보부법입니다. 그 후신이 국가정보원입니다. 이런 국가비밀경찰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파쇼국가입니다.

민중권력 쟁취하여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국정원을 해체하자!

노동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 파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가압류 제도는 전두환·노태우 정권하의 제3자개입금지법이 그러했듯이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악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벌적 손해가압류를 없애려면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원천인 노동악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현 노동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는 보호입법이 아니라 그것을 금지하고 통제하는 치안유지법적 법률입니다. 또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으로 일제 치안유지법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면 노란봉투법 제정에 머무르지 말고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보호입법으로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새로 제정해야 합니다.

보수양당독재 타도하고 민중권력 쟁취하여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노동악법 철폐하자!